

# KBA WEEKLY BRIEFING

Korea Business Association Europe

2023.1.23 - 1.27

VOL.345

## CONTENTS

### I

#### EU TRADE POLICY

- ▶01.23 EU, 제10차 對러시아 제재안 논의...석유제품 가격상한 등이 주요 쟁점
- ▶01.23 EU, 올해 우선 추진 70개 글로벌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선정
- ▶01.24 프랑스-독일, 원자력 기반 수소의 친환경 수소 인정에 합의
- ▶01.24 브르통 EU 집행위원, 핵심 광물 원자재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필요성 강조
- ▶01.24 EU의 보조금 규제 완화 추진에 우려 목소리 제기
- ▶01.25 유럽의회 4개 위원회, 기업 공급망실사 지침 관련 위원회 입장 확정
- ▶01.25 EU 정상회의, IRA법 대응 관련 EU 단일시장 공정 경쟁환경 보호 강조
- ▶01.26 베스티거 부집행위원장, EU 단일시장 보호에 중점 둔 보조금 간소화 제안 예정
- ▶01.26 美 조 맨чин 상원의원, IRA법 규제 완화 시도 무력화 위한 개정법안 제안
- ▶01.27 EU 이사회,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 법안에 대한 대대적 수정 요구
- ▶01.27 EU,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석유제품으로 확대 및 상한가격 수준 등 협의

### II

#### EU 환경규제 뉴스 – KIST EUROPE 제공

- ▶01.27 OECD, '피부감작성 시험법(TG 442D) 나노물질 적용가능성'에 대한 보고서 발표
- ▶01.27 EUON, '나노물질의 노출 관리'에 관한 Nanopinion 발행
- ▶01.27 OECD, '나노물질 입자 크기 및 입자 크기 분포 시험법(TG 125) ' 웨비나 개최

## ① EU, 제10차 對러시아 제재안 논의...석유제품 가격상한 등이 주요 쟁점

- EU 이사회는 25일(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에 즈음하여 제10차 對러시아 제재를 논의할 예정으로, 러시아 석유제품 가격상한, 원자력 섹터 제재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
  - EU 집행위는 제10차 제재안의 일환으로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를 원유 이외에 디젤, 휘발유, 항공유 등 석유제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 다만, 가격상한 대상을 석유제품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EU 이외에도 G7 및 호주의 동의가 필요
  - 일부 EU 외교관계자에 따르면, G7은 디젤 또는 휘발유 등 고가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상한과 난방유와 같은 저가 제품에 대한 별도의 가격상한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 도입을 주도한 미국의 자넷 옐런 재무장관은 최근 17개국에서 60억 달러 비용을 감축한 점을 지적,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
  - 다만, 옐런 장관은 20일(토) 석유제품의 종류가 다양한 점을 이유로 가격상한제 도입이 보다 원유보다 복잡하다고 언급, 석유제품 가격상한제에 다소 부정적 입장을 시사
- 앞서 EU와 G7 및 호주는 EU의 해상운송 러시아 원유 수입금지 제재에 맞춰 러시아 원유에 대한 60달러 가격상한을 도입, 국제 원유 수급에 커다란 장애 없이 러시아의 원유 판매 수익을 제한하는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고 평가
  - 다만, 60달러 상한가격은 러시아 우랄 원유의 국제 판매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우크라이나는 금주 예정된 원유 가격 재검토에서 상한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
  - 이에 대해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일부 EU 회원국이 지지하고 있으나, G7 회원국 사이에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 한편, EU는 제10차 제재안으로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 확대 및 러시아 원자력 섹터에 대한 제재 등도 함께 논의될 예정
  - 다만,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과 자국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중인 헝가리 등 일부 회원국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원자력 섹터 제재 합의는 쉽지 않다는 지적

## ② EU, 올해 우선 추진 70개 글로벌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선정

- EU는 '글로벌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Global Gateway Initiative)'의 일환으로 올해 우선 추진 사업으로 70여개의 프로젝트를 선정

- 글로벌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응하는 EU의 개발도상국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로 2027년까지 총 3,000억유로의 공공·민간 자금을 투입하는 내용
- EU는 지난달 글로벌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협의,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통상 등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기로 합의
- 이를 위해 올해에는 조기착공 또는 양해각서 체결이 가능하거나, 투자 및 금융조달이 용이하여 조기성과가 예상되는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내년 이후 진행할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준비작업을 추진할 예정
- 이에 따라 올해 우선 추진할 프로젝트로 흑해 해저 디지털케이블, 지중해 및 북아프리카 연결 해저 광케이블 부설, 카메룬 댐 및 수력발전소 건설 등 70개 프로젝트 초안을 선정
- 우선 추진 프로젝트 리스트 초안은 지난 20일(금) 처음 논의되었으며, 금주 추가협의를 통해 2월 6일(월) 최종 확정될 전망

● 한편, EU 관계자는 프로젝트 선정에 지정학적 고려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강조, 이니셔티브 추진에 정치적 메시지가 없고 단순한 사업적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

- 그러나, EU-인도 에너지 전환 파트너쉽, 필리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은 중국 인근에서, 카자흐스탄 수소 프로젝트, 중앙아시아 도로연결, 타지키스탄 수력발전소 건설 등은 러시아 인근에서 추진됨에 따라 정치적 합의가 완전하게 배제되기 어렵다는 지적

### ③ 프랑스-독일, 원자력 기반 수소의 친환경 수소 인정에 합의

● 프랑스와 독일은 원자력 기반 수소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청정수소 공동 로드맵' 및 지중해 경유 수소 파이프라인 'H2 Med'의 독일 연장 등에 합의

- 양국은 22일(일) '프랑스-독일 각료회의(Franco-German Council of Ministers)' 후 공동선언문에서 각국 에너지 믹스 선택의 '기술 중립성 원칙'을 존중하며, 신재생에너지, 저탄소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관련 기술 투자 확대와 이를 위한 공동 로드맵 개발에 합의
- 이를 위해 양국은 4월 경 수소 관련 양자간 워킹그룹을 통해 수소 관련 공동 입장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
- 이번 합의 내용이 이른바 '가스 지침(the Gas Directive)' 개정을 위한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에서 반영될지 주목되나, 룩셈부르크 등은 여전히 원자력 기반 수소의 청정에너지 인정에 반대하는 상황

● 이번 합의는 프랑스, 루마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헝가리 등이 원자력 기반 저탄소 수소를 친환경 수소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 친환경 수소의 정의를 신재생에너지 기반 수소로 제한할 것을 주장한 독일이 유럽 수소시장의 확대 강화를 위해 프랑스 등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
- 한편, 양국은 스페인 피레네 산맥을 경유하는 'MidCat'을 대체, 자중해를 경유하여 포르투갈, 스페인 및 프랑스를 연결하는 'H2 Med' 수소 파이프라인을 독일까지 연장하는데 합의
  - 또한, 양국은 프랑스-독일 배터리 충전 및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화협력 플랫폼 창설에도 합의
  - 다만, EU 전력시장 개편과 관련하여 가스 가격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가격을 이원화 (decoupling)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점에 이르지 못함

#### ④ 브르통 EU 집행위원, 핵심 광물 원자재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필요성 강조

-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은 23일(월) 중요 핵심 광물 원자재 벤류체인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필요성을 강조
  - 브르통 집행위원은 국제적인 핵심 광물 원자재 공급 및 재활용 경쟁에서 EU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 특히 2030년까지 리튬, 코발트, 니켈, 마그네슘 및 흑연 등 5가지 배터리 원료 광물의 역내 공급량 25% 확보를 위해 총 70억 유로의 투자가 필요하고, 2040년까지 총 130억 유로를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
  - 또한, 브르통 집행위원은 현재 집행위가 법안을 준비 중인 이른바 '핵심 광물 원자재법(CRMA)'을 통해 허가절차 신속화 및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될 전략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EU 단일시장의 광물 재활용 산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
  - 특히, 캐나다, 우크라이나, 나미비아, 카자흐스탄 등과 광물 원자재 공급망 강화 협력을 더욱 진전시킬 것이라고 언급. 이의 일환으로 24일(화) 나미비아를 방문, '지속가능한 광물 원자재 및 신재생 수소에 관한 EU-나미비아 파트너십 협정' 이행에 관해 협의할 예정
- 한편, EU 집행위는 친환경 전환에 필요한 광물 원자재 공급망 강화를 위해 이른바 '핵심 광물 원자재법(CRMA)'을 추진, 현재 집행위 내부시장총국, 통상총국 등이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며 오는 3월 8일(수) 법안 초안을 발표할 예정

## ⑤ EU의 보조금 규제 완화 추진에 우려 목소리 제기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美 IRA법에 대응 EU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 간소화 및 세제 혜택을 추진할 방침을 표명한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
- 발디스 봄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23일(월)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에서 EU가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세제 혜택을 포함한 차별적 보조금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대응이라고 언급
  - EU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 IRA법과 유사한 법률을 도입할 경우 글로벌 경제에 광범위한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보조금을 통한 친환경 기술 개발은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 시장 및 공정한 경쟁환경을 훼손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
- 네덜란드 마르크 류터 총리도 IRA법 대응 보조금제도 개편은 외과수술처럼 정밀함이 필요하다고 강조. 다만, 네덜란드가 보조금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
  - 또한, 장기예산계획을 통한 EU 예산,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등 모든 회원국이 사용할 수 있는 다액의 기금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언급, 친환경 산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기금 창설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시사
- EU 경쟁 및 단일시장 담당 집행위원을 역임한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전임 총리는 EU가 이미 수차례에 걸친 보조금 규제 완화를 단행한 점을 지적, 계속적인 보조금 규제 완화는 궁극적으로 EU 단일시장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
  - 특히,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의 주요 임무는 EU 단일시장의 완결성 수호라는 점을 지적, 현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의 보조금 규제 완화 행보를 비판

## ⑥ 유럽의회 4개 위원회, 기업 공급망실사 지침 관련 위원회 입장 확정

-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ECON) 등 4개 상임위원회가 24일(화) EU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 관련 위원회 입장을 표결 확정
  - EU는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기업에 공급망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작년 EU 이사회가 관련 입장을 확정
  - 유럽의회는 5월까지 법안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확정한 후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3자협의(trilogue)를 통해 내년 금기 의회 임기 만료전 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
  - 이와 관련, 경제통화위원회(ECON), 국제통상위원회(INTA), 외무위원회 산하 인권소위원회 (DORI) 및 산업위원회(ITRE)가 24일(화) 표결을 통해 지침 관련 위원회 입장을 확정

- 중도 우파 국민당그룹(EPP)이 지침에 따른 기업의 의무를 완화할 것을 요구한 반면, 중도 좌파 및 진보그룹이 기업 의무 강화를 요구하는 등 두 가지 축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위원회 표결에서는 대체로 중도 좌파의 의견이 수용된 것으로 평가
- 특히, 경제통화위원회는 국민당그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융분야를 지침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입장을 확정하고, 국제통상위원회와 인권소위원회도 진보적 내용으로 입장을 확정. 반면, 산업위원회(ITRE)는 다소 보수적인 내용을 위원회 입장으로 확정했다는 평가
- \* 유럽의회 사법위원회(JURI)가 공급망실사지침 담당 상임위. 경제통화위원회, 국제통상위원회, 환경위원회, 외교위원회(산하 인권소위원회), 산업위원회, 고용사회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가 지침 관련 구속력 없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문화교육위원회 등 5개 상임위는 관련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결정
- 환경위원회(ENVI)는 2월 9일 지침 관련 입장 확정을 위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며, 내부시장 및 소비자보호위원회(IMCO)는 추가적인 조율을 위해 관련 표결을 3월로 연기

● 한편, 지침 담당 상임위원회인 법무위원회(JURI)도 24일(화) 지침과 관련한 토론을 실시

- 이번 토론에서는 지침 적용 범위를 공급망(supply chain)으로 한정할지 또는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으로 확대할지 여부와 기업의 책임범위 등이 주로 다루어짐
- 이번 토론에서도 국민당그룹은 지침의 일부 내용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규정을 담고 있다며 비판, 지침에 따른 기업의 부담 완화를 시도
- 이와 관련, 일부 시민단체는 국민당그룹이 제시한 지침 개정안이 독일화학고용자협회 및 독일화학 산업협회 등 산업계가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내용이라며 비판

## ⑦ EU 정상회의, IRA법 대응 관련 EU 단일시장 공정 경쟁환경 보호 강조

● EU 정상회의는 EU의 새로운 산업정책 방향 및 보조금 규제 완화로 인해 EU 단일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중점을 둘 전망

- 2월 9~10일 개최될 EU 정상회의는 에너지 위기 및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에 대응한 EU의 경쟁력 유지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으로,
- 언론에 공개된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에너지 위기 및 IRA 등 대내외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EU 단일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다만, EU 집행위가 2월 1일 국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정책 방향 관련 입장을 제시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내용도 다소 변경될 수 있다는 전망
- 또한, 정상회의는 핵심 광물 원자재를 중심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대외 통상정책 추진을 주문

- 특히, IRA법에 대한 EU의 산업정책 대응을 위한 자금과 관련, 정상회의는 기존 EU 기금의 유연한 집행과 (모든 회원국의) 공정 자금 접근을 강조하며, EU 집행위와 EU 이사회에 이른바 'SURE 프로그램'\*의 확대를 촉구

\* SURE(Support to mitigate Unemployment Risks in an Emergency)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회원국 고용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신설한 이른바 '실업위험완화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회원국 보증(250억 유로)을 토대로 금융시장에서 최대 1,000억 유로를 저리로 조달, 회원국에 대출 지원하는 내용

- 이와 관련, 마르크 류터 네덜란드 총리도 IRA법 대응에 각 회원국이 심도 있는 국내 정책 변경을 통해 대응해야 하며, EU의 추가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

- 한편, EU 정상회의는 차기 (3월 23~14일) 회의에서도 에너지 위기 및 IRA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추가 협의할 예정

## ⑧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 EU 단일시장 보호에 중점 둔 보조금 간소화 제안 예정

- EU는 역내 단일시장 보호와 회원국 간 보조금 경쟁 회피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전략섹터 지원을 위한 '한시적 위기 및 친환경 전환을 위한 보조금 프레임워크'를 준비 중
  - 마거릿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25일(수) EU 경쟁 관계 이사회 발언에서 집행위가 친환경 전환의 전략적 중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간소화를 위한 이른바 '한시적 위기 및 전환 보조금 프레임워크'를 준비 중이라고 언급
  - 특히, 모든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기존의 간소화된 보조금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략 산업에 대한 보조금 계산 간소화 및 신속한 지급 승인 실시를 통해 투자자의 빠른 투자 결정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
  - 또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 친환경 관련 전략섹터의 투자를 유럽에 유지토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투자이전 제한 규정(anti-relocation)'과 세제혜택을 포함, 역내 신규 제조시설 건설 투자를 지원하는 규정의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
- 다만,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친환경 전환을 위한 전략섹터 지원은 단일시장의 원활한 운영이 전제라는 점에서 단일시장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
  - 따라서, 전략섹터에 대한 모든 지원은 단일시장의 균열 방지, 고용 유출 방지 및 회원국 간 단결 유지의 관점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
  - 특히, 보조금 지급 여력이 불균형한 상황에서 보조금 규제 완화시 발생할 수 있는 회원국 간 보조금 경쟁, 일부 재정 여력이 충분한 국가 및 일부 대기업에 대한 지원 편중 등에 따른 EU 단일시장 균열 및 단일시장 완결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
  - 이에 회원국 간 재정불균형에 따른 보조금 격차 해소를 위한 EU 차원의 기금 조성을 위해 EU 집행위가 여름 경 이른바 '유럽 주권펀드'의 신설을 제안할 예정이며,

- 유럽주권펀드 신설에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인 보조금 불균형 해소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유럽개발은행(EIB)과 협의 중이라고 언급
- 또한, 보조금 경쟁 격화시 결과적으로 납세자 부담만 더욱 가중된다고 지적, 보조금이 아닌 기업의 독창성, 혁신, 기술 및 국제통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
-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보조금의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전환에 관련되거나 에너지 및 제3국 보조금의 영향을 받는 섹터에서는 더 많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 그러나 보조금 도입은 한시적이고 미국 IRA에 영향을 받은 전략 분야에 제한되어야 한다고 덧붙임
- 특히, IRA법은 EU와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통 목표 추진을 훼손할 일부 문제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EU가 이에 강력하고 비례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
- 한편,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이 앞서 제안한 '한시적 위기 및 친환경 전환 보조금 프레임워크'에 대한 각 회원국의 의견제시 기간이 25일(수)로 만료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를 토대로 오는 9일 개최될 EU 정상회의에 앞서 2월 1일(수), 보조금 규제 완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

## ⑨ 美 조 맨친 상원의원, IRA법 규제 완화 시도 무력화 위한 개정법안 제안

-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은 25일(수) IRA법 일부를 개정한 이른바 '2023년 미국자동차안보법(American Vehicle Security Act of 2023)'을 제안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추진을 주도한 맨친 상원의원은 미국이 자동차 산업 혁신을 가져온 포드 자동차의 출발지로써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핵심 국가 지위를 유지해야 하며, 따라서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중국 등 해외수입에 의존할 수 없다고 강조
  - 이에 IRA법과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는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 의지하지 않겠다는 의회의 입법취지에 따라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며 관련 개정안을 제안
  - EU는 세액공제 조건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할 것을 요구하는 IRA법 규정과 관련, EU 배터리에 대해 동일한 취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맨친 상원의원은 개정법을 통해 이를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
- 한편, IRA법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의 조건은 △배터리 광물 채굴 및 가공 요건 △배터리 구성품 제조 및 조립 요건 등 두 가지
  - 7,500달러 세액공제 가운데 절반은 배터리 핵심 광물 가운데 최소 40%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된 것이어야 하며, 동 비중은 매년 상승하여 2027년까지 80%로 확대됨

- 나머지 절반은 전기차 배터리 구성품의 최소 50%가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경우에 지급되며, 동 비중도 매년 상승하여 2029년에는 100%로 확대
- 美 재무부가 IRA법 이행 가이드라인 발표를 연기함에 따라, 아직까지 북미 생산요건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는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

## ⑩ EU 이사회,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 법안에 대한 대대적 수정 요구

- EU 이사회는 EU 집행위가 제안한 이른바 '단일시장 긴급조치(Single Market Emergency Instrument, SMEI)' 법안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을 요구
  - 작년 9월 EU 집행위는 코로나19 확산시 회원국간 국경봉쇄 및 수출통제 등에 따른 일부 물자공급 부족 사태를 교훈으로 이른바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 법안을 제안
  - 단일시장 긴급조치는 각종 위기로 인한 일부 중요 물자의 공급망 교란 방지를 위해 기업에 대해 특정 제품의 제고 및 생산능력 정보 공개, 특정 주문 우선공급 및 생산라인 조정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위반 기업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
  - EU 이사회는 법안의 긴급조치 발동 권한이 집행위에 부여된 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안 심의를 중단할 수 있으며, 중요 제품 비축 명령권 등 일부 내용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 이는 EU 이사회가 법안이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집행위의 개입을 허용하고,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가하는데 대한 산업계의 우려를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집행위는 단일시장 긴급조치가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발동되고, 대응조치 발동 모든 단계에 이사회가 개입할 수 있으며, 대응조치도 제한적인 타깃형 해법임을 강조
- 법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내년 유럽의회 임기 만료 전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집행위 3자협의(trilogue)를 통해 최종 타협안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
  - 다만,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스웨덴이 EU 이사회 의장국을 담당하고 있는 올 해 상반기에는 이사회의 법안 관련 입장 확정이 쉽지 않고, 하반기 EU 이사회 의장국 스페인에 대해 연내 법안 관련 입장을 확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가중될 전망
  - 반면, 유럽의회는 올 하반기 EU 이사회 및 집행위와 3자협의를 실시, 임기 만료 전 법안 확정을 위해 올 상반기 중 법안 관련 의회 입장을 확정한다는 방침

## ❶ EU,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석유제품으로 확대 및 상한가격 수준 등 협의

- EU 이사회(상주대표부대사회의)는 27일(금) 제10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대해 협의, 러시아 원유 상한가격 조정 및 러시아 석유제품 가격상한제 도입 여부 등을 집중 협의할 예정
  -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일 1주년인 2월 24일 이전 제10차 제재안 확정을 추진, 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 가격상한, 통상 및 금융제재 확대, 원자력 섹터 제재 등을 협의할 예정
-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도는 EU, G7 및 호주 등이 참여, EU의 해상운송으로 수입되는 러시아 원유 수입금지 제재와 동시에 판매가 배럴당 60달러를 초과하는 러시아 원유에 대한 해상운송 및 보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시행중
  - 원유 가격상한제 실시 후 국제 원유 공급의 교란 없이 매일 1.6억 달러의 러시아 원유 판매수익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번 이사회에서는 EU와 G7 등의 합의에 따른 1월 중순 상한가격 재검토 차원에서 협의될 예정
  - 26일(수) 현재 러시아 원유 국제가격은 배럴당 약 45달러 수준으로, 발트3국(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및 에스토니아)과 폴란드는 60달러 상한가격으로는 러시아 원유 판매를 통한 전비 확충을 제한하기 어렵다며 상한가격을 40~50달러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구
  - 다만, 미국은 지난주 러시아 원유 상한가격이 글로벌 에너지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하게 파악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상한가격 조정은 3월에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 표명
- EU 이사회는 오는 2월 5일 EU의 러시아 석유제품 제재 개시에 맞춰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를 석유제품으로 확대하는 방안 및 상한가격 수준에 대한 첫 공식협의를 실시할 예정
  - 이와 관련, EU 집행위는 26일(목) 디젤 등 고급 석유제품에 대해 배럴당 100달러, 난방유 등 할인 석유제품에 대해 배럴당 45달러의 상한가격 도입을 제안
- 한편, EU 이사회는 원유 및 석유제품 제재 이외에 對러시아 제재 우회 방지를 위한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 확대, 추가 금융 제재, 원자력 제재 등도 협의할 예정
  - 발트3국과 폴란드는 벨라루스를 통한 對러시아 제재 우회를 차단하기 위해 가구, 아스팔트, 고무 및 유리제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제재를 벨라루스에 확대하고, 벨라루스와 러시아에 등록된 화물차량을 통한 EU로의 화물 운송 금지를 요구
  - 또한, 러시아와의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금지 및 스위프트(SWIFT) 차단 대상 러시아 금융기관 확대 및 지난 제9차 제재에서 제외된 다이아몬드 교역 금지 등의 제재를 요구

- 특히, 일부 회원국은 러시아 원자력 섹터 제재를 재차 요구하고 있으나, 일부 회원국의 러시아를 통한 원자력 발전소 유지보수의 어려움과 러시아 로사톰(Rosatom)과 원자력 발전소 2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형가리 등의 반대로 제재안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전망

## II

## EU 환경규제 뉴스 – KIST EUROPE 제공

### ① OECD, ‘피부감작성 시험법(TG 442D) 나노물질 적용가능성’에 대한 보고서 발표

- OECD는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OECD TG 442D)’의 나노물질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보고서 초안(*Applicability of the key event based TG 442D for in vitro skin sensitisation testing of nanomaterials*)\*을 발표함. 보고서 요약 및 결론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과 답변(Q&A) 내용이 포함됨.
  - △ 나노물질 적용가능성, △ 시험법 적용에 적합한 나노물질, △ 적용할 수 없는 나노물질, △ 시험법 나노물질 적용 시 고려사항, △ 나노물질 적용 시 프로토콜 변경 필요성

[KBA Europe 홈페이지 세부내용 바로가기\(클릭\)](#)

### ② EUON, ‘나노물질의 노출 관리’에 관한 Nanopinion 발행

- EUON(유럽나노물질관측소)는, 2022년 12월 20일 ‘나노물질의 노출 관리(Controlling Exposure to Nanomaterials)’라는 제목의 전문가 기고(나노오피니언, Nanopinion)\*을 발표함.
  - 저자Araceli Sánchez 박사(스페인 보건안전연구소, INSST)에 따르면, 지난 15년 동안 나노입자의 노출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 및 방법론이 개발되어 왔으며, 2007년 이후로 영국 표준연구소(BSI),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독일 산업안전보건연구소(IFA)를 등 일부 정부기관은 작업장 나노물질 노출을 통제하기 위한 ‘노출 수준 기준(benchmark exposure levels)’을 권장하기 시작함.
  - 나노물질에 대해서 작업노출기준(Occupational limit values, OEL)을 제안한 기관은NIOSH 뿐이며, OEL 은 작업장 공기 중 화학물질에 대하여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안전한 노출농도(8시간 평균)를 의미함. 이러한 노출 기준값은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적인 값이며, 근로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노출될 수 있는 안전한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KBA Europe 홈페이지 세부내용 바로가기\(클릭\)](#)

### ③ OECD, ‘나노물질 입자 크기 및 입자 크기 분포 시험법(TG 125)‘ 웨비나 개최

- OECD는 2023년 2월 7일, ‘나노물질의 입자 크기 및 입자 크기 분포 측정‘을 위한 시험법(OECD Test Guideline 125: Nanomaterial Particle Size and Size Distribution of Nanomaterials)에 관한 웨비나\*를 개최함.
  - 본 웨비나에서는 ‘TG 125 시험법‘에 기술된 ‘1 나노미터(nm) 에서 1,000 nm 에 이르는 나노물질 입자 및 섬유입자의 크기 및 크기 분포 결정‘ 관련 내용을 다룰 예정이며, 참가자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시험법 개발 지원을 위한 타당성확인(validation) 연습뿐 아니라 ‘TG 125 시험법‘의 사용법 및 한계점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음.

[KBA Europe 홈페이지 세부내용 바로가기\(클릭\)](#)